



# 음식물 쓰레기 계량장비 잦은 고장 ‘애물단지’

### 무게 잘못 계산해 요금 초과 부과되고 용량 넘쳐나 작동 안되는 사례도 빈번 제주시 “고장·포화 잦은 곳 관리 강화”

지난 15일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고 있는 송모(31)씨는 클린하우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60원에서 90원 가량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요금이 900원이 넘게 나온 것이다. 이에 송씨는 음식물 쓰레기 계량장비(RFID)에 적혀진 관리업체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없어 내일 다시 전화

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건 송씨는 업체 담당자에게 당시 결제한 카드번호를 알려줬고, 업체는 송씨가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확인,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환불이 이뤄지려면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RFID 장비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뚜껑이 열리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김모(39·여)씨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이 같은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클린하우스에 설치한 RFID 장비가 잦은 고장과 포화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1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 장비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는

클린하우스로 확대했다. 17일 현재 제주시가 설치한 RFID 장비는 3052대다. 이에 대한 예산은 장비 한 대당 150만원 가량으로, 약 4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관리에 나서기는 사실상 힘들다”면서 “고장이나 포화가 잦은 곳에는 관리를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장 접수 건수에 대해서는 “하루에 5-10건 정도 접수되고 있지만 자세한 건수는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다음 정도에야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강정마을회 등이 17일 해군기지 앞에서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행사 일환으로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을 갖고 구상권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태윤기자

## “이젠 제대로 된 마을에서 살고 싶다”

### 어제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 열려

#### 구상권 철회·진상조사도 촉구

강정마을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1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관계자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평화활동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철 강정마을 회장을 “지난 10년간 강정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면서 “땅과 바다를 빼앗기고 주민들은 이제 제대로 된 마을에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이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이

후 진상조사를 통해 해군기지에 대한 잘못을 가려내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우리나라는 적폐와 국정농단에 물든 지난 10년의 정권은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시작은 투명하고 과정은 분명한 결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상권이 철회되어야 하고, 해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기지 정문 앞에서 인간 띠 잇기를 진행하고 시낭송, 춤과 노래 공연, 마을 주민들의 구럼비 이야기로 꾸며진 문화제를 열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범도민 대책위원회, 전국대책회의 등은 마을 곳곳에서 19일까지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하기로 한 17일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왼쪽)들과 반대하는 단체(오른쪽)들이 제주도의회를 찾아 각자 피켓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고 물아세웠다. 이들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헌신 하고 있는 제주도 행정,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자의 노력과 고충을 겨냥해 합리적 판단에 의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오라단지 동의안 심사... 찬반 '격돌'

### 어제 시민단체·정당·시민모임 '반대' 피켓 시위 '찬성' 오라동 주민들 “시민단체가 협박 일삼아”

제주도의회가 '제주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하기로 한 17일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위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립각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녹색당·노동당·정의당, 행동하는 시민 200인 모임 소속 3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갈등 부추기는 오라단지 개발사업 절차이행 중단하라', '한라산 국립공원 턱밑에 웬 위성도시? 오라단지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제

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등 피켓을 들고 거둬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행동하는 시민 200인 모임 구성에 주축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고은영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라단지 사업을 반대하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며 “현재까지 카운팅한 도민만 22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 주민들도 도의회를 찾아 사업 찬성 견해를 피력했다. 오라동·오등동 발전협의회 회원 및 오라동 주민 일동은 '제주도민과 언론에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묻지마식 반대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

고 물아세웠다. 이들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헌신 하고 있는 제주도 행정,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자의 노력과 고충을 겨냥해 합리적 판단에 의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작금의 제주도 상황은 시민사회단체가 왕”이라며 “누구도 시민단체의 횡포와 독단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범호 오라동 연합정년회장도 보도 자료를 내고 행동하는 시민 200인 모임을 겨냥해 “법과 제도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 절차를 밟고있는 우리 시민대표로 선출된 도의원, 도지사에 ‘찬성하면 낙선’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영천기자 yj@ihalla.com

## U-20 월드컵 테러 경보 주의→경계 단계로 격상

### 제주경찰, 대테러 대비태세 강화

U-20 월드컵대회가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11일 수원 폐막식까지 23일간 제주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월드컵대회 개최지역에 대한 테러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기간 국가중요 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지역경찰의 테러예방순찰과 테러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치안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사 시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에 대테러상황실을 가동하게 된다. 특히 선수단이 출입하는 제주국제공항에 대해서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대테러 순찰과 일제수색을 대폭 강화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떡튀’ 기획사 대표 “피해자 4명 더 있다”

### 조사과정서 진술... 경찰, 사실 확인 중

수십 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공연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본보 5월 17일자 4면)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또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는 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공연기획사 대표 김모(34)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 4명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에 접수된 15명 외에 추가로 4명에게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는 한편, 피해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계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새롭게 드러난 피해자 중 한 명은 유명 걸그룹 멤버 J(24)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피해자들은 J씨와 김씨의 주선으로 다른 투자자들과 제주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김씨는 이러한 J씨와의 친분을 투자자들에게 과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엌그릇 한리일보**  
공익광고 '소통(스마일) 캠페인'

| 5월의 주제 |  
최고의 행복 '내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이 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5월만이라도 일상속 무관심 미움 불평에서 벗어나 사랑 존경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만나고, 웃음을 보여주는 5월을 만들어 갑시다.